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80호 1판 (음력 11월 1일)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국회 예산안 처리 D-3 급박한 탄핵정국에도 지역 살림은 꼭 챙겨야

친환경차·호남고속철 2단계 등 광주·전남 내년 국비확보 총력전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현 시국과 관련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데다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정국의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2일 제출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400조7000억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액심사에 이어 국회 예결위의 증액심사가 진행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탄핵정국 등 어수선한 정국 때문에 지난 7일에서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가 구성되는 등 전반적인 심의 일정이 촉박해지는 등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지역 현안 예산들이 예결위 등에서 자칫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국비 추가반영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403억원)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19→74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50억원),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24억원), 솔로몬 로파크 조성(10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가 정부 반영안에서 누락되거나 대거 삭감됐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예산도 정부안 19억원에서 74억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비도 상임위에서 반영되면서 일부 현안 사업에 대한 ‘숨통’이 터졌지만,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더라도 예결위에서 삭감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면 내년 현안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윤장현 광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김동철 예결위 간사, 장병완 예결위원, 이개호 예결소위원을 만나 광주 주요사업 56건 2133억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남도**＝막판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신규 예산을 반영하거나 증액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 우기종 정무부지사 등이 30일부터는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최종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가 내년도 신규 예산반영이나 증액을 바라는 주요 현안은 25건, 지역별 관심사업은 3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요 건의사업은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추진(건의액 1000억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300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1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광양항 석유화학 돌핀시설 19억원, 전체 사업비가 400억원인 수산식품수출가공단지 설계액 4억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단선 전철 건설 ▲여수～남해 도로 건설 등도 포함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가 지난해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여당 예결위 간사,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예산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친일·독재 미화…5·18은 축소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광주와 전남지역 5개 정당과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회원들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정 역사교과서 3종 공개…‘대한민국 수립’ 뉴라이트 주장 반영
5·18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내용·의미 축소…계엄군 사진 삭제

역사·교육학계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다. 지역 교육계와 역사학계는 “5·18민주화운동의 축소, 박정희 독재의 미화, 건국절 사관의 완성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정화 교과서 폐지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2·6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국정교과서 공개 이후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우려했던대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현재 교과서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면서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 견줘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의미가 대폭 축소됐는가 하면, 계엄군의 폭력 진압 사진 등은 삭제해 “의도적”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노성태 국제고 교사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경우 기본적 사실조차 다르게 서술했다고 주장했다.

역사학자들이 아닌, 경제학자들이 현대사 부분 집필을 맡은 점도 편향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학교 교과서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독재로의 회귀”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전남 역사교사모임 등도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편향·오류 서술 여부를 분석해 29일 발표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http : //historytextbook.moe.go.kr)에 이북(e-Book) 형태로 다음달 23일까지 4주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치는 한편, 국정 역사 교과서의 향후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친박도 ‘박대통령 명예퇴진’ 건의

朴, 검찰 조사 끝내 거부
김현웅 법무장관 사표 수리

청와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던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주류 핵심 의원들마저 결국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열에 사실상 가세했다. 〈관련기사 4면〉

친박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과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 조원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갑윤, 유기준, 윤상현, 홍문종 의원 등 이른바 ‘왕당파’ 주요 중진들은 28일 긴급 회동을 열어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직접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사실상 하야 요구에 준하는 것으로 탄핵과 특검, 국회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박 대통령의 거취 결정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국민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이 약속했던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2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